

민주 계파 갈등에 조국發 악재까지… 김민석號 통합 ‘삐걱’

강민구 윤리감찰 부단장 하루만에 해임
명청대전, 전대·대표 취임후에도 지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재판 발언’ 충돌

취임 보름을 넘긴 김민석 당 대표가 계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민구 윤리감찰 부단장을 임명 하루만에 해임한 가운데, 민주당이 연대를 위한 대화를 준비 중이던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재개될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발언을 해 친명(친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당 안팎으로 시끄러운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1일) 한 일간지에 강민구 당 윤리감찰단 부단장과 박선원 최고위원이 나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임명 하루 만에 강 부단장을 해임했다. 8·17 전당대회 이후 당 내 계파 갈등이 해당 대화 내용 공개로 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강 부단장을 임명 하루만에 해임하며 선제적으로 의혹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강민구 부단장은 친명(친이재명)계에 가까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에게) 작업 들어온 듯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정청래 쪽 장인재 부단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서 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세종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표 의원한테 작업 들어온 듯하다”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도 보였다.

김기표 의원이 단장을 맡은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직속기구로,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민주당은 극심했던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사이 싸움)’을 벌였고, 여진은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민석 대표에게 경선을 통한 청년 최고위원 선

출을 요구했으나, 김 대표는 재선의 전용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지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선 김 대표가 강연 중 정청래 전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며 당의 전략과 관련 두 사람이 서로 절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해 친청계의 반발을 불렀다.

정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김 대표의 행동이 “마이크 독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대표가 추진하는 유튜브 방송 ‘민주당TV’도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보는 김여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해 만들었다

는 추측이 이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통합보다는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친청계 또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합당의 대상으로 보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민주당의 커다란 과제로 다가왔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 일부를 두곤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제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고 12·3(내란)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발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의 연대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쟁적 공격은 매우 아쉽다”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치적 지혜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풀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상 조작기소와 관련한 여러 사실적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조작기소에 대한 정치검찰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검찰의 인권에 대한 무자비한 침탈 등을 바로잡고 제대로 설 계기를 마련하고 헌법 정신에 응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국 원장께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논리를 끌어들이며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원장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무엇이 그리 뻔했다.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추석 전 청문회 정국… 김승원·용혜인 ‘최대 격전지’

이소영 15일, 홍지선 16일 확정
오는 14~18일 집중 개최될 전망
野, 공소취소·의원직 유지 집중 공세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가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야당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맹공을 예고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장관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이형일 ▲법무부 김승원 ▲국방부 강신철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국토교통부 홍지선 ▲중소벤처기업부 이소영 장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5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6일로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이형일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5일로 조율 중이며, 강신철 후보자의 청문회도 14~18일 중 하루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의 청문회도 이르면 18일 개최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특히 여야 간 충돌이 강하게 벌어질 장은 법무부·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장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각각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비례대표 2번 한 골수저’ 등의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점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철회’ 의혹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공세를 가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김 후

보자가 김 전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제넨셀 임상시험 때문에 ‘사람잡는 약’이 나올 뻔했다.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임상시험 승인됐고, 그 승인 때문에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 이력은 아원의 주요한 공세지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지명됐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1일)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의원”이라고 했다.

용혜인 후보자도 공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2번 역임한 데다, 장관직에 지명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는 관례를 지키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제를 악용해 두 번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됐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한 보원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용혜인을 ‘형도자’이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김소희 의원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임기 21개월간 기본소득당에 투입되는 세금은 약 43억원에 이른 다며 “입법과 국정감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의원실에 국회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의힘 “청년 주거 희망 되찾겠다”

토론회 열고 李 정부 주거정책 비판

국민의힘은 2일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심각하다. 문자 그대로 청년 부동산 자옥”이라며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년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통계 개편 이후 최저치다. 그 힘

들었던 문제인 정권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며 “이제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전세도 구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다. 주택 구입도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며 “(청년들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평소 공공임대 찬양론자인 김용범 전 실장이 어제 그만뒀다. 국회에서 딸에게 공공임대에서 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김 전 실장이) ‘내 딸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하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런 소리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다”며 “그 딸은 아빠 찬스로 방배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정권의 진짜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장관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녀들이 빌라나 공공 임대에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청년

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고,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의 미래가 정말 페버스 주택, 그리고 욕조가 있는 고시원인가”라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임대 주택을 전전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닌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저축하면 나도 언젠가는 내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되찾아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첫 내 집 마련 금융 세금 부담을 낮춰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